

이낙연 복귀 민주, 총선준비 박차... 오늘 공관위 첫 회의

내일 두번째 회의 전략공천 지역 1차 선전... 15일부터 공약 발표
추, 공동선대위원장 역할... 종로 아파트 계약, 종로 출마 준비
공관위 18명 광주·전남 의원 없어 공천 중앙 '입김' 작용 우려

이낙연 국무총리의 당 복귀가 현실화된 가운데 민주당이 13일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조만간 선대위 출범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한다. 우선 민주당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가 구체화되면서 이달 내에 중앙선거대책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당 내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이해찬 대표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수도권 선거를 지원할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총리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종로구에 위치한 아파트 전세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민주당은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잠룡'인 이 총리의 '브랜드'를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중이다.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등에서 '보수통합', '제3지대론' 등 정계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 총리의 이미지를 활용해 '안정성'을 부각하는 캠페인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 호남에서 제3지대 신당과 민주당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펼쳐진다면 전남 출신

인 이 총리가 지원 유세에 나서지 않는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종로에서 출마하는 만큼 호남 지원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호남권 접전 지역에 호남 대권 주자인 이낙연 총리가 지원 유세에 나선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 총리가 종로에서 출마하는 만큼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관위원 1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당내 인사로는 부위원장인 윤호중 사무총장,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전혜숙 의원,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 신명진 의원이 포함됐다. 지난 6일 발표한 원혜영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당내 인사는 총 8명이다. 외부 인사로는 조병래 전 동아일보 기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오재일 5·18 기념재단 이사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심재명 명필름 대표, 변호사인 이해정·원민경씨, 치과의사인 이현정씨, 프로바둑 기사인 이다혜씨, 총선기획단 위원으로 활

동한 황희두씨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 의원이 참여가 배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호남 지역 공천에 지역의 목소리보다는 중앙당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호남 지역 모 의원은 "중앙당에서 전략공천 및 후보자 컷오프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후폭풍을 부를 수 있다"며 "호남이 무너지면 전체 총선 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관위는 14일 국회에서 청와대 경력을 겸직의 대표 직함을 사용하는 문제 등을 놓고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이력’ 사용 여부에 대한) 여전히 주장이 팽팽하다"며 "공관위에서 결정하고 최고위에서 다시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역평가) 하위 20%에 대한 결과는 합산이 이뤄지지 않았고, 공관위원에게 밀봉된 상태로 전달됐다"며 "공관위에서 (통보 등과 관련한) 절차적 과정을 협의하지 않을 까 한다"고 덧붙였다. 전략공관위는 15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전략공천 대상 지역을 1차로 선정한 뒤, 앞서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지역을 우선 전략공천 대상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정한 바 있다. 호남 지역 전략공천은 2월 중순을 전후해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공약도 15일부터 순차 발표한다. 우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 '비례○○당' 명칭사용 불허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 못 쓴다

선 청년을 겨냥한 공약들이 시리즈 발표의 초반부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의 주거·일자리 지원 방안이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의 신성장 벤처창업 시 세계 혜택, 청년 맞춤형 일자리 조성 등이 공약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대표하는 단어로 보기 어렵고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례"라는 단어와 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나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투표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 받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 투표용지에 기재된 내용을 비추어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향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크다"며 "사용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의를 침해하는 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

중앙지검 반부패부 2곳·공공수사부 1곳 등 13개부서 폐지 추진

법무부 조직개편 추진안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안 담겨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곳에서 2곳으로, 같은 검찰청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거점 검찰청에 8개

부서만 남기고 5곳은 폐지한다. 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의 외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역시 공판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곳은 형사부로 바뀐다. 조세·과학

靑 "조국 수사' 관련 인권침해 청원, 인권위에 공문으로 송부"

인권위 "인권침해 판단엔 조사"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인권위가 전해 왔다"고 13일 밝혔다. 강경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

날 오전 청와대 SNS를 통해 내용은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로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

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만큼,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공문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가려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는 아니지만, 인권위의 조사 가능성이 열린 만큼 이번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압박의 수

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전담할 계획이다. 비직제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폐지되는 13개 부서 가운데 10곳을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규칙'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진정이나 민원, 직권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의거해 해당 기관에 권고 결정을 한다. 진정 내용이 엄중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슬라브수시공모습
철제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